민주당 '4억 공천헌금' 파문

광주·전남 석권 물 건너 가나

지방선거 안방표심 흔들
'공천 비리' 또 터질 가능성
향후 정계개편 입지 축소

"터질 것이 터졌다."

조재환 사무총장이 최락도 전 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4억원을 받아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 민주당 한 당직자의 한탄 섞인 말이다.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뭔가 한 건이 크게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사건을 조재환 총장이 당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특별당비를 모금한 개인적 사안으로 축소시키며 파문 확산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간부회의를 가진 뒤 "계획된 시나리오이자 민주당에 대한 외압, 말살 정책"이라며 여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른바 '음모론'으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상당한 도덕적 상처를 입어 광주·전남지역 석권이라는 지방선거 목표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른 공천 비리는 없나=우선 광주·전남지역에서 또 다른 공천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지방선거는 물론 정치적 재기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전남지역 모 기초단체장 후보가 같은 지역의 일부 광역의원 후보로부터 자금을 수수했다는 설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여기에 전남지역 민주당 모 국회의원 부인이 기초단체장 후보로부터 자금 수수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상태다.

특별당비와 관련된 소문도 무성하다. 일부 경선 탈락 후보들이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가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다음 달 초반 무렵 광주·전남지역에서 또 다른 공천 비리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여러 가지 공천 비리 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민주당은 조 총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특별당비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연민의 정으로 지지했으나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반응이다. 서민 등 바닥표의 이탈로 이어질 전망도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이 7 대 3 정도로 열린우리당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열린우리당과의 간격이 6 대 4 정도로 좁혀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정치 개혁 성향이 높은 광주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격차가 거의 비슷해졌으며 광주시장을 제외하고 구청장,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5 대 5 비율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계개편 종속변수로 전락 우려=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당초 지방선거 목표는 대폭 수정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교두보 확보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이며,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0%만 승리해도 성공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민주당은 호민련(호남 자민련)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2곳 이상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정계개편 과정에서 종속 변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한화갑 대표의 지방선거 책임론이 거론되며 민주당은 다시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경우 한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열린우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민주당은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3일 오후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공천헌금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조재환 사무총장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표단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비장한 표정으로 당사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봉합…이제부터 장기전

한·일 '독도 협상' 타결 의미와 전망

"6월까지 탐사·지명 등재 중단"

한일 양국이 한쪽은 측량 계획을 철회하고 다른 한쪽은 독도 부근 해저지형에 대한 지명 등재를 연기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그러나 양측의 이번 합의는 일본 측이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한 6월 말까지만 탐사를 중지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지명 등재를 '적절한' 시기에 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본은 7월부터는 탐사를 다시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우리 측도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는 언제든 지명 등재를 시도할 수 있어 갈등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독도 부근 해역을 분쟁지역으로 비쳐지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일본으로선 빌미만 있으면 동해 갈등을 유발할 공산이 커 동해 대치가 일상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동해 EEZ 탐사 도발에 이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의 방한 교섭은 한국의 지명 등재를 포기시키려는 '계획적 도발'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측량 계획을 미리 밝혀 동해상 긴장을 높이는 방법으로 독도와 그 주변을 국제분쟁지역화하고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한국 정부를 압박해 지명 등재 포기를 받아내려 했다는 지적이 그 것.

일본은 1978년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IHO에 독도 부근 수역에 대해 자국 지명 등재를 추진해 왔으며 '쓰시마 분지'와 '순요퇴' 등 이미 두 곳에 일본식 이름을 등재하고 공용화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위한 사전조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우리 정부가 이같은 움직임을 뒤늦게 파악, 작년에 일본식 지명이 붙은 두 지역을 '울릉분지'와 '이사부 해산'이라고 명명한 것을 포함해 독도 부근 18곳의 해저지형에 한국식 지명을 붙이고 IHO에 등재하려 하자 일본은 강력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다.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18곳의 한국식 지명이 IHO에 받아들여진다면 일본은 지금까지의 지명 '선점'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우리측에 등재 포기를 주장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틀간의 외교차관 협의에서 일본 측은 올 7월로 예정된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의 독도주변 해류관측 조사를 문제삼아 대응했다. 해양조사원의 조사는 독도로부터 12해리 안에 있는 우리 측 영해에 국한돼 있지만 일본 측은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이 자기 측 EEZ 경계선이라며 그 구역은 자기측 EEZ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한국측 EEZ 안에서 이뤄지는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에 대해 한국이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한국의 해류관측 조사가 자국 EEZ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인 셈이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22일 오후 협상 타결 직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오른쪽)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외교통상부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盧대통령 "책임총리제 계속 유지"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한명숙 신임 총리의 취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역할분담 문제와 관련, '책임총리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외교.안보 집행과정은 대통령이 관장하고 (정부) 기관, 재원(관리), 인적자원 배분 문제는 총리와 협의해 처리하고 있다"면서 "대개 이런 기조 위에서 앞으로 국정이 운영돼 나갈 것"이라며 "이 점을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해도 내가 가지게 되는 안건은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며 "직접 정책에 관한 문제는 총리가 주재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나중에 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석하더라도 나는 제도, 혁신에 관한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나도 국무회의에 당분간 참석하겠지만 기본 원칙은 이전과 같이 간다.""며 "그동안 해왔듯이 앞으로도 총리실은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직접 총리를 보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꼭 관여하고 책임져야할 문제 외에는 청와대를 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운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제도와 문화로, 일처리 내용 보다 일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직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월요일에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의 안건도 대체로 일하는 제도, 일하기 위한 제도, 절차, 과정, 문화 이런 것에 대해 주로 토의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각 부처로 확산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허성관 광주과기원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행자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광주과학기술원장이 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3일 "허 원장은 지난 2월 선임된 포스코 사외이사직 수행과 관련해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반 기업에 취업할 경우 그 업체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의무적으로 공직자 윤리위에 업무연관성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허 원장은 포스코, 우리금융지주 등 2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